

유아교육 발전 방향 및 차기정부의 정책 과제

장명립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조기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선진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에 이어 2013년부터는 3, 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아교육 주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보다 발전적인 정책 과제들을 선정·추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즉, 사회 통합 및 지속가능발전 등 국가의 주요 국정 아젠다를 고려하고, 미래 사회 전망과 국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유아교육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하고 바람직한 유아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차기 정부가 향후 5년간(2013~2017년) 추진해야 할 유아교육 발전 15대 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미래사회 전망과 국외 유아 교육 정책 동향

가. 미래사회 전망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유소년 인구(0~14세)의 구성비 역시 낮아질 전망이다. 유아교육의 대상 연령인 만 3~5세 유아 수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미래 교육체제는 개방성, 다원화, 다양화의 패러다임 하에 개인의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양질의 교육 환경과 핵심 역량 내용을 제공하여 보다 우수한 글로벌 창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세계민주시민의 기초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본 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장명립·황성은·김미나가 수행한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2013~2017'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나. OECD의 유아교육 정책 동향

선진국에서는 취학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상 연령도 만 5세에서 3세, 2세까지 낮추고 있는 경향이다. OECD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유아교육 정책 권고문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더욱 늘리고, 만 5세 누리과정에 이어 3세까지 확대할 것과 주당 20시간의 무상교육과 함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각각 가구소득의 3%, 2%, 1% 수준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조기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기 교육격차 해소에 염두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¹⁾

다. UNESCO의 유아교육 정책 동향

UNESCO는 한국의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권고문에서 내용·개념이 우선 통합되고 이어서 구조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통합의 이원적 논의보다는 통합의 정도(수준)의 문제로 해석해야 하며,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와 유아교육·보육의 재개념화 및 재구조화가 지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보육의 통합보다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호 교류와 이동 통로가 개방되어야 하고, 지자체 수준에서 서비스 간의 협력 및 다양한

혜택과 교육을 통한 부모·가족 지원과 공평한 출발을 위한 취약계층 배려 정책을 권고하였다. 특히, 최근 UNESCO는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의 'ISCED level 0' 단계는 0세~취학전 교육을 포함하여 초기 유아교육을 2개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즉, ① 0~2세 유아교육적 발달(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ISCED 01), ② 3세~초등취학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ISCED 02)이다.²⁾

2. 유아교육 현황 및 문제점

가. 연령별, 지역별, 기관유형별 이용 차이

만 3~5세 유아의 취원율은 약 87%수준이며, 만 3세는 어린이집 취원율이 높고, 연령증가에 따라 만 5세는 유치원 취원율이 더 높은 경향이다. 최근 5세 누리과정 시행 및 3, 4세 확대 도입에 따라 전체적으로 취원율이 증가하였으나, OECD 선진국들의 취원율이 90~100%를 상회하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만 3~5세 취원율을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다(표 1 참조).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읍면지역에(4,502개원 중 2,510개원), 사립은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고(3,922개원 중 3,415개원), 원아수의 공사립 분담 비율이 균등하지 못하며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인어서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 경험의 지역별,

1) OECD(2011),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한국어 번역본), 한국개발연구원.

2) UNESCO(2011), Revision of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ISCED), General Conference, 36th Session, Paris 2011.

〈표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2012년)

연령	취원 대상아 ¹⁾	유치원 ²⁾		어린이집 ³⁾		유치원+어린이집		미이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3세	466,807	130,986	28.1	268,279	57.5	399,265	85.5	67,542	14.5
4세	494,388	229,911	46.5	200,516	40.6	430,427	87.1	63,961	12.9
5세	448,774	252,852	56.3	152,207	33.9	405,059	90.3	43,715	9.7
전체	1,409,969	613,749	43.5	621,002	44.0	1,234,751	87.6	175,218	12.4

자료: 1) 주민등록 인구통계(2011. 12. 31. 기준)
 2) 교육통계 자료(2012. 4. 1. 기준)
 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2012. 3. 31. 기준)

〈표 2〉 국공립·사립 유치원간 분담 비율(2011)

단위: 개, 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원수	4,502(53.4)	3,922(46.6)	8,424(100.0)
교원수	9,239(23.9)	29,423(76.1)	38,662(100.0)
원아수(3,4,5세)	126,095(22.3)	438,739(77.7)	564,834(100.0)
원아수(5세)	74,729(32.0)	158,995(68.0)	233,724(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통계청(2011. 4).

〈표 3〉 학부모의 이용 선호 시설

단위: %

구분	1순위 응답	중복응답
국공립 유치원	40.5	74.3
국공립 어린이집	39.0	64.8
민간 유치원	7.3	27.3
민간 어린이집	7.0	18.0
직장 어린이집	6.0	14.8
기타	0.3	0.5

주: 사례수는 400명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5),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기관유형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표 2 참조).

자녀가 다니기를 희망하는 시설 1순위는 국공립 유치원이 40.5%로 가장 높았고,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39.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의 경우에도 국공립

유치원의 선호도가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나. 유아교육 공적 투자 미흡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상황을 OECD국가 수준과 비교해 보면, OECD국가 유아 1인당 연간 유아교육비 평균 지출액은 6,210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4,281달러로 68.9%수준이다. GDP 대비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은 0.2%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정부의 공적 재원 지원을 받는 기관 비율도 49.7%로, OECD 평균 79.7%의 6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³⁾.

다. 기관 설립유형별 교사 배경 및 근무여건 차이

공립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졸자가 52.5%, 사립은

3) 장명림·서문희·송신영(2012), 미래사회와 공생을 위한 육아정책의 선진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생발전 협동연구총서 12-01-39.

2~3년제 전문대 졸업자가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립유치원은 10년 이상 고경력 교사가 64%이상인데 비해, 사립은 5년 미만이 60%를 차지하여 공사립간 교사 학력 및 경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급여 수준은 국립유치원 교사는 월 평균 약 357만원, 국립은 약 330만원, 사립은 약 166만원으로 공사립간 차이가 크다⁴⁾(표 4, 표 5 참조).

라. 소득계층별 차이 및 지원 문제

만 3세 이상 유아가 있는 가구(조사 대상 전국 2,527가구)의 99.8%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 학원, 개별교육 및 학습지, 기타 교육 등 유아 사교육을 이용하고, 유아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 대비 사교육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⁵⁾(표 6, 표 7 참조).

또한 저소득층은 여전히 서비스 이용에서 비용 부담을 느끼며 일부는 비용 부담이 기관 미이용의 이유가 되므로,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

〈표 4〉 학위취득별 유치원 교사 현황(2011)

단위: 명(%)

구분	계	국립	공립	사립
고졸	24	0(0)	9(0,01)	15(0,1)
2년제 대졸	7,250	1(5,6)	928(10,1)	6,321(21,5)
3년제 대졸	11,709	0(0)	137(1,5)	11,572(39,3)
4년제 대졸	13,973	4(22,2)	4,837(52,5)	9,132(31,0)
대학원 석사졸	5,429	13(72,2)	3,266(35,4)	2,150(7,3)
계	38,662	18(100,0)	9,221(100,0)	29,423(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표 5〉 경력연수별 유치원 교사 현황(2011)

단위: 명(%)

구분	계	국립	공립	사립
~5년 미만	18,955	3(16,7)	1,263(13,7)	17,689(60,1)
5년 이상~10년 미만	8,380	1(5,6)	2,069(22,4)	6,310(21,4)
10년 이상~15년 미만	3,678	1(5,6)	1,169(12,7)	2,508(8,5)
15년 이상~20년 미만	2,098	5(27,8)	818(8,9)	1,275(0,4)
20년 이상~25년 미만	2,980	6(33,3)	2,131(23,1)	843(2,9)
25년 이상~30년 미만	1,972	2(11,1)	1,544(16,9)	426(1,4)
30년 이상~35년 미만	408	0(0)	210(2,3)	198(0,7)
35년 이상~	191	0(0)	17(0,2)	174(0,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표 6〉 가구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의 차이 및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월평균 사교육비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비율		
	사례수(100%)	사교육비	사례수(100%)	사교육비비율	
유아수	1명	2,059	147,1(158,1)	2,052	4,59(4,82)
	2~3명	310	278,4(260,6)	309	8,45(7,16)
월평균 소득	199만원이하	151	91,4(116,1)	151	6,17(7,76)
	200~299만원	637	121,9(116,5)	637	5,24(5,15)
	300~399만원	870	171,6(176,1)	870	5,36(5,38)
	400~499만원	393	181,6(192,4)	393	4,42(4,78)
	500만원이상	307	247,4(259,3)	307	4,41(4,70)

자료: 차성현·김순남·김지경·박선옥·전경원·민병철(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4)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12), 누리과정 관련 통계 자료.

5) 차성현, 김순남, 김지경, 박선옥, 전경원, 민병철(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표 7〉 월 평균 보육료·유아학비 및 추가 납부액 차이

단위: 천원(명)

구분	전액 면제 대상				일반 대상				총계	(수)
	영아		유아		영아		유아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전체	4.3	40.7	44.4	87.7	292.3	51.6	249.5	95.3	123.1	(1,971)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 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가정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 취약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아동 지원과 함께 부모의 정신 건강 및 양육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가정의 부모들이 가장 걱정되는 자녀의 발달 영역으로 사회·정서 발달 영역을 꼽았으며, 가정유형별로 조손가정에서는 정서발달과 언어발달을,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의 언어발달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⁷⁾

마. 유아교육 보육 이원화로 인한 통합적 발전의 한계

유아교육과 보육의 담당 부처 및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국가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종합 발전계획 수립 제한, 동일 정책의 다른 명칭 사용 및 시행방법(예: 유아학비 지원 아이즐거움 카드, 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 등 행정·재정적

지원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동일 지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제한된 대상 유아수(중복되는 만 3~5세)를 놓고 원아 모집 시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며 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 관계 지속되고 있다. 특히, ‘3-5세 누리과정’ 도입·시행으로 교육과정 및 학비지원 재원은 통합되었으나, 관리 체계는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동일한 교육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르게 운영하는 데에 대한 학부모의 혼란과 불만이 야기될 수 있으며, 두 부처간 지원 업무의 경쟁적 추진 및 유사 사업의 시행으로 비효율적 예산 사용,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과 관련한 국가 및 지자체·교육청간 갈등관계 표출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동일한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관리체계의 이원화에서 오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3. 최근 유아교육 정책 변화

가. ‘3-5세 누리과정’ 도입 및 시행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5세 누리과정’에

6) 장명림(2010),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 세미나자료2010-03, 육아정책연구소.

이어 만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됨에 따라, 2013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3-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아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한 양질의 공통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

2012년 4월부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유치원에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와 같이 정보공시제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주요 항목으로는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각 유치원의 정보는 '유치원 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est.go.kr>)'를 통해 일반 국민이 검색할 수 있다.

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2012년 1월 26일에 개정, 4월 27일에 시행된

「유아교육법」에서는 교과부장관이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고, 그 동안 교과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치원 평가를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과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기존에 2009년부터 교과부가 추진해 오던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은 정책사업 평가를 거쳐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

라. 무상교육 확대, 운영위원회 도입

2012년 3월 21일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 무상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고, 무상교육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과부장관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중등학교와 같이 유치원에도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마. 국공립유치원장 임기·공모제 도입

2012년 3월 21일에 「유아교육법」 외에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3월에 국·공립 유치원장에 대한 임기제와 공모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원장은 한번 원장이 되면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유치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유치원장 공모제를 통해서도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유치원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수한 교원의 전문직 진입이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역동적인 국·공립 유치원 교원 인사 보직 경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유아교육 발전 방향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이상에서 국내의 유아교육 정책 동향과 변화를 살펴볼 때,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유아교육기관의 투명성, 공공성, 책무성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교사의 자기 개발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2013년 3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이전 유아기부터 평등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기에 교육 격차 해소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특히,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동일한 질의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 유아교육 발전 방향

유아교육 정책은 서비스에의 접근성(Availability), 비용의 적정성(Affordability), 서비스의 질(Quality)을 추구한다. 즉, 모든 유아들에게 지역차, 소득차, 개인차에 관계없이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의 보편성과 균등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기회 제공의 보편성과 균등성을 확보한다.

둘째,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한다.

셋째, 유아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한다.

넷째, 유아교육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다섯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을 지향한다.

나. 차기정부의 정책 과제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는 <표 8>과 같다.

<표 8> 차기정부의 정책 과제

발전 방향	정책 과제	세부 내용
1.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및 실질적 형평성 확보	1. 기본 누리과정 지원금액 현실화	표준교육비에 근거하여 유아학비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원
	2. 기본과정외의 추가 비용 차등 지원	기본과정외의 방과후과정 및 추가비용은 소득기준 차등 지원 ----- 자녀교육비 부담을 가구소득의 5~10% 이내로 개선

(표 8 계속)

발전 방향	정책 과제	세부 내용
II. 공공 인프라 확대 및 기관 관리·지원 강화	3.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원아 분담율을 매년 2.5%p씩 증가시켜 35%까지 확대 유아교육 수요 신규발생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 읍면지역 소규모공립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적정규모로 확대 육성
	4.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회계규칙 도입 공공성 확보 및 표준교육비 준수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건비 30%까지 지원
	5.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유치원 평가 지속 추진, 결과를 국가 재정 지원과 연계 유치원 컨설팅 지원 강화
III.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6. 교원의 근무 여건 및 전문성 제고	유아교사 양성기간을 4년제로 강화 교사가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및 행정인력 배치·지원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공립의 90%수준으로 제고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7.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누리과정 운영 인적·물적 요건 강화 방과후과정의 기본 운영 지침 제시 누리과정 담당 교사 심화 연수 실시 운영시간 및 학급구성 형태별 누리과정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누리과정의 질적 수준 관리·감독 및 컨설팅장학 지원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동 적용 누리과정 운영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IV. 조기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 계층 지원 강화	8. 조기 교육격차 해소	유아기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 및 '조기 발달지연 유아 지원단(가칭)' 구성·운영 발달지연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희망유아교육사업 지속 추진
	9.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계층가정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유치원의 취약계층가정 유아 대상 종합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운영
V.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10. 정부의 전달체계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의 조직과 인력 확대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조직과 인력 확대
	11. 육아정책연구소 국책연구기관 역할 강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유·보 전문가 교류·협력 협의체 구성·운영
	12.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유치원에서는 가정과 연계, 부모교육 및 참여 활동 실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가 부모 함께 참여 프로그램 운영 유아교육 기부체제 구축 및 기부사업 활성화
	13.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대중매체 통한 올바른 유아교육 대국민 홍보 EBS 교육방송의 유아교육 홍보 및 지원 기능 강화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자격인증제(가칭) 도입
VI.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14. 취학전 교육·보육의 체계화	0~5세 연계 과정 내에서 0~2세 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체계화
	15. 누리과정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누리과정 실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합동 질관리 강화 관련 부처 합동으로 '누리과정 추진 TF' 구성·운영